

# 학자금 대출 갚지 않으면 과태료 낸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풀어야 할 숙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환기준 소득을 얻기 시작했으면서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해외에 이주할 때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하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상환의무와 상환 방식, 신고의무, 미납 및 신고의 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 있다.

**월 최소상환 금액 3만원, 전년도 상환했으면 소득없어도 계속 갚아야**

이 가운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상환 기준소득(연1,592만원)을 초과해 소득을 얻는 경우 대출자는 그때부터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즉 대출자가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상환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갚다가 실직, 폐업, 사업부진 등 기타의 사유로 상환기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전년도에 상환 기준소득 이상을 벌어들인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면 해당 대출자는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또 대출 학생이 졸업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한다.

**연 1회 재산현황 신고, 의무상환액도 신고해야...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번 시행령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신고와 상환의무를 강조하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제재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고 그 부담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만약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고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정책자금 대출과 같은 다른 공적 대출과 달리 강도 높은 제재규

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보면 먼저 대출 학생은 국세청에 대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출금을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

완납 안하면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체류 제한도

간접적으로 상환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대출자는 그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이주나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1학기 시작에 앞서 학자금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연 5.7% 확정...지원대상, 연 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자녀**

제도 시행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이자율은 현행 학자금 대출 제보다 0.1% 낮은 5.7%로 확정됐다. 이자율은 교과부장관이 한 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금리를 고려해 매 학기마다 고시한다.

대출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연 소득 약 4,839만원, 현재기준)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높은 이자율, 복리이자, 신청 자격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대상 축소, 군 목부 중 이자부담 문제 등이 다.

교과위 소속 야당위원들은 제도 자체의 후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표한 시행령(안)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법 자체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8일 특별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함께 국회의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민주당 원내 대학회의에서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2조~3조원의 재정이면 대학생 절반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복리문제와 군



학자금 상환제는 그 대출과 재정 부담의 규모에서 다르다.

정부가 다른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한 이유도 정부의 재정부담과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새길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받아들여 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이자장사' 반발 커**

복리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5.7%의 금리는 복리이다.

즉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런 실직이나 해고, 사업부진, 현금 흐름 악화 등으로 제때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상환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금리 5.7%를 복리로 계산해 모두 32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19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최초 원금의 3배에 이른다. 이 것은 교과부가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에서 교과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별법에는 복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원래대로...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도 지적돼**

신청자격은 정부가 원래 발표했던 대로 C 학점 이상으로 되풀리고 신입생에 대해서도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는 군 복무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이를 이행하는 동안 이자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앞으로 제도 추진과정과 시행령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 재산신고 및 상환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미납시 해외 이주 및 여권발급도 제한 복리이자, 대상축소 등 문제점 개선 요구도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자동차, 부동산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면 연 1회 재산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게는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출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5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이다.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연 소득 4,839만원 이상)과 대출조건 강화로 인해 대출 신청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들(신입생 내신 6등급 이하, 재학생 B 학점 미만)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의 30% 수준인 74만 여명의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율 인하, 복리이자...개선요구도 많아**

목부 중 이자부담, 높은 이자율 등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자율...다른 정책금리와 형평성에도 문제**

5.7%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3%,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4.5%이며 그 밖의 많은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3~4%대이다.

물론 이들 정책자금과 취업후

##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렌칭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류 판매
- 핵심인력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포장담당
- 프로덕트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발판, 문서세탁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고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일괄히 해결

불용물품의 일괄처리부터 전량 수거까지의 고객에 대한 전방위서비스를 위한 통합운영의 필요성 인식과 고객과의 효율적 협력을 위한 재정을 가능케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용물품 수거업체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물량의 증가율이 부족한 무인수거업체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부족한 인력이 자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LASER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